

탄핵심판 '계속 출석' 강조한 尹...공수처 수사 영향 줄까

기소 전 가능한 현재 변론 3-4회...출석 자체 영향 제한적 '변론 준비' 이유 출석 전후 계속 조사불응 땐 차질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온 가운데 향후 현재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기소에 앞서 이날을 포함해 오는 23일, 다음달 4일과 6일 등 서너차례 변론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출석 자

체로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현재에 출석하지 않는 날에도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종일 변호인단과 접견한다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전날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시도했으나,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오후 9시30분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조사를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추후에도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기일이 아닌 날에도 변론 준비 시간을 보장하려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공수처가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오후 현재 첫 출석 등을 들어 오전 강제구인 등 조사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석 때는 조사하지 않을 계획인지 등을 묻는 말에

"본인의 변론권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탄핵심판 기일이 아니더라도 변호인이 하루종일 접견한다면 조사가 어렵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현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일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이 예정된 날짜는 이날을 포함해 이틀에 그치는 만큼, 공수처는 나머지 날짜에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전망이다. 기소를 위한 검찰 송부를 앞두고 시일이 촉박해지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당일 오전이나 저녁에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조사를 성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기

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종전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를 수사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데다 피의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수사기관이 포기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라며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조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관위, 尹측 '부정 투표지' 주장에 "부정선거 증거될 수 없다" 반박

"투표지 위조 주장, 대법 판결서 증거될 수 없음 입증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몽그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뺏겨진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한 "투표소에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템

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몽그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뺏겨진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몇 번 떴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끼워 놓고 열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윤상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상현 국회의원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은 난동 당시 17명이 담을 넘어갔던 상황에서 '훈방될 것'이란 발언을 해 폭동을 키운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연합뉴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

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 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檢 "공수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넘겨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넘기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구속 후 열흘가량(체포 기간 포함)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 사건을 넘겨야 한다

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연장될 것을 전제로 논의하면 안 된다"며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장이 불허되면 바로 기소해야 하므로 기소에 필요한 최

소기간 확보를 위해 1차 기간 만료 전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사의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20일까지 10일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법원 연장 시 다음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장관·박춘섭 수석 현재, 尹 탄핵심판 증인채택

내일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1일 현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들 중 이 전 장관과 박 수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다수 국무위원을 포함해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박 실장은 2월8일 오후 3시30분, 이 전 장관은 2월11일 오전 10시30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현재는 오는 23일에는 예정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같은 날 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소환을 보류하기로 했다. 문 대행은 국회 측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유지할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증인 채택된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다음 달 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연합뉴스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증재활 / 인지재활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원 집중치료
침, 뜸, 부항, 약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1 인증기간 | 2024. 10. 19 - 2028. 10. 18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동행요양병원 | 광주역앞 (신안동 2-3)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 062-720-2000